

해외자원개발 예산·융자지원 확대

민간 참여 활성화… 광물확보 나서

산업부,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광해광업공단 역할 재정립 법 추진
올해 예산 675억, 융자비율 70%
실패 상환 감면율 90%까지 높여

정부가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희토류를 계기로 해외 핵심 광물 확보가 국가 산업안보 차원의 과제로 부각되면서, 그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공공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기능을 제도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5일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요약본을 발표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공공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 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희토류 종합대책은 작년 12월 출범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 제1호 정책으로, 광산개발·분리·정제·제품생산까지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부실 논란 이후 공공기관의 직접 참여를 대폭 제한하면서, 민간의 해외 광산 투자도 위축돼 왔다. 특히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원광 확보부터 분리·정제까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민간 단독으로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희토류 이미지.

/산업통상부

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공이 초기 탐사·개발 단계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광해광업공단을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재정립해 해외 희토류 프로젝트 발굴과 정책금융 연계, 기술·인력 지원을 종합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산업부는 2026년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675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융자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실패 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감면율도 최대 90%까지 높인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과 수출입은행의 투자 조건 역시 완화해,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 추진이 특정 국가나 광종에 국한된 조치가 아니라, 핵심광물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해외자

원개발 지원 체계의 복원으로 보고 있다. 희토류를 계기로 시작하지만, 향후 리튬·니켈·코발트 등 첨단산업 핵심 광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아울러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희토류(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며,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 신설·세분화 등을 통해 수급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 규제합리화 등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R&D 로드맵 수립,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펀드' 신규 조성 등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을 방문해 현대차, 포스코인터내셔널, 고려아연 등 주요 희토류 기업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애로와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소비국으로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대외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주가조작땐 ‘패가망신’… 끝까지 추적”

이찬진 금감원장, 정무위 업무보고
'원스톱 불공정거래 수사 체계' 구축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 체계
금감원 내 구축, 신속·효율성 극대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

부터 배당받은 사건뿐 아니라 금감원이 자체 발굴한 사건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 원장은 금융권 자체구조 개선의 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금융지주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CEO 선임 절차와 합리적 성과보수 문화가 금융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금감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가 자체구조 선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연초 시장감시 조직과 합동 대응단을 확충한 데 이어, 다수 종목 연계 혐의군까지 적출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특히 대규모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계좌 지급 정지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조사·검사·회계감리를 병행해 수사기관 이첩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할 확대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인지수사권이 도입되면 검찰로

감독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금융상품 설계·제조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빈钺하는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예방과 사이버 보안 강화에 노력하겠다"며 "IT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확립해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IMF·뱅뱅어음지정·인가를 통해 종합금융 투자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한 데 이어, 올해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정착과 종투사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도 지속한다.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 기준을 통한 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이어가며, PF 연착륙과 시장 안정, 산업구조 선진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패러다임'과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포함한 5대 중장기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오는 9일 2026년도 세부 업무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CJ제일제당, 설탕·밀가루 가격 내린다

각각 평균 5%, 5.5% 인하

CJ제일제당은 지난달 초 업소용(B2B)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6%, 4% 인하한데 이어 일반 소비자용(B2C) 설탕·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인하율은 백설 하얀설탕, 갈색설탕 등 B2C 설탕 제품(총 15 SKU)이 최대 6%(평균 5%)이며 백설 찰밀가루, 박력1

등·중력1등·강력1등 밀가루의 경우 전 제품(총 16 SKU) 최대 6%(평균 5.5%)다.

CJ제일제당측은 "최근 국제 원당·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며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올리브영 '웨이크메이크' K-브랜드 만든다

자체 브랜드 론칭… 글로벌 확장
'마이 컬러, 마이 웨이' 캠페인 공개



물론 일본 등에서도 소비자 접점을 늘렸다. 일본 최대 뷰티 편집숍 액코스 메, 플라자, 로프트 등으로 현지 공급망을 늘려 왔다.

올리브영은 자체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진출도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폴란드 유통기업 가보나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가보나는 유럽 지역 60개 국가에서 8000종 이상의 화장품을 유통하고 있는데, 올리브영의 바이오 스킨케어 '바이오힐보', 비건스킨케어 '브링그린', 색조브랜드 '컬러그린' 등은 가보나를 통해 우선 폴란드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다.

해당 브랜드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바이오힐보의 경우, 고기능성 항노화 제품인 프로바이오 3D 리프팅 크림 매출에서 외국인 구매 비중이 44%에 달한다.

올리브영은 자체 브랜드 확장으로 수출 전선뿐 아니라 K뷰티 범위를 폭넓게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청하 기자 mlee236@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5889가구 매입

국토부 "패스트트랙 시행, 신속매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5000건을 넘어서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540건을 추가로 인정하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총 5889가구를 매입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3만6449명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110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 720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7일 기준으로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5889가구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새정부 출범 이후 전체 실적의 87%인 5128가구를 매입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는 "LH와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